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4년 3월 17일 (수)
전경련회관 3층 제2회의실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

목

차

초대의 글	1
-------------	---

토론회 일정	3
--------------	---

발제 자료	4
-------------	---

토론자료	45
------------	----

초대의 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과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격동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해법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농업계 내부에서만 논의해 왔으나, 개방화 시대의 농업 문제는 농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애정과 다른 산업계의 후원도 중요합니다.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농촌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공동으로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농업계 밖의 전문가와 함께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최근 정부가 수립한 「119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및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한국경제연구원장 좌 승 희

토론회 일정

14:00~14:30 등록

14:30~14:40 환영사 : 좌승희 KERI 원장

14:4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 좌장 : 이정환 KERI 원장
- 주제발표 : 김정호 (KERI 선임연구위원)
 - 제목 :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 토론
 - 권영민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김영래 교수 (충북대 국제경영학부)
 - 안세영 교수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육동인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 이승철 상무 (전경련 경제조사실)
 - 이언오 전무 (삼성경제연구소)
 - 허병석 소장 (두산R&D센터 식품연구소)

가나다 순

17:00 폐회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I. 한국 경제와 농업 / 7

II.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 / 10

1. 농가소득 문제의 현실 / 10
2. 부채 문제의 실상 / 14
3. 농업경쟁력의 실상 / 16
4. 농업구조 문제의 현실 / 20
5. 시장개방의 영향 / 24
6. 농촌지역 문제의 실상 / 26
7. 90년대 농정방식의 한계 / 30

III.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비전 / 32

1. 농업 발전의 가능성 / 32
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 / 34
3. 농업·농촌의 비전 / 37
4. 농정 기조와 정부 역할 / 40

I. 한국 경제와 농업

□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의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

○ 한국은 1960년 이후 농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함

- 총생산의 농업 비중: ('60) 45% → ('02) 3.7%

- 총고용의 농업 비중: ('60) 65% → ('02) 9.0%

⇒ 5개 선진국(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도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변화 속도는 한국이 압도적

○ 농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서 두 개 변환점이 발견됨

- 생산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65년, 2차: 1973년)

(1965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1965~'73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1973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

- 고용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78년, 2차: 1985년)

(1978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1978~'85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1985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

⇒ 고용구조 변화는 생산구조 변화 후 대략 12~13년의 시차를 나타내며, 한국은 선진국보다 변화 속도가 빠름

* 농업생산 비중이 40%까지 감소하면 농업부문이 서비스부문보다 생산규모가 작아지는 구조전환이 나타남

* 2002년 현재 농업 생산 및 고용 비중은 각각 4%와 9%로 감소

○ 한국 농업은 고용구조 조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짐

- 생산구조 변화(생산비중 감소: 40% → 7%)에 소요된 기간 : 유럽 5개국 평균(117년), 미국(92년), 일본(73년), 한국(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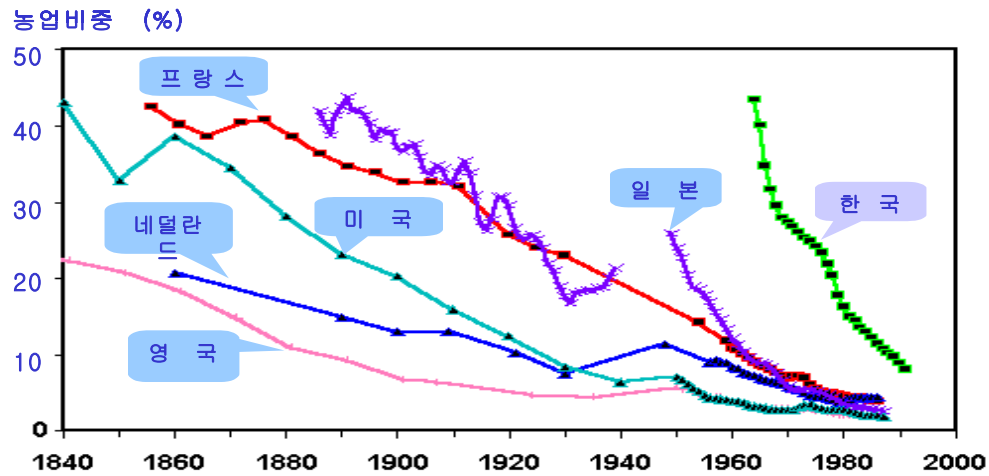
- 고용구조 변화(취업자비중 감소: 40% → 16%)에 소요된 기간: 유럽 5개국 평균(63년), 미국(42년), 일본(31년), 한국(14년)

⇒ 농업 구조변화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5배 짧음

□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업부문에는 전직이 곤란한 고령자가 퇴적

- 농업과 비농업간의 직업 전환이 매우 제한적이며, 선진국들도 농업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순전직률은 대략 2%에 못미침
 - 농업/비농업 순전직률 : 독일(0.35%), 프랑스(1.10%), 네덜란드(1.97%), 영국(1.04%), 덴마크(1.35%), 일본(-0.14%), 한국(1.21%)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취업자의 전직률이 20대에서는 3~6%를 나타내지만, 40대 이후에는 1% 이하로 하락
 - * 직업전환의 어려움: 교육 및 전문화 문제(특히 전문화된 비농업부문 직업은 폐쇄적), 노령화된 농업 노동력의 직업 이동성 문제
- ⇒ 장기적으로 농업취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과 은퇴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Age Profile Curve; APC)으로 볼 때 아직도 노령화가 계속되는 단계임
 - 선진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추세는 농업생산 비중의 감소 속도가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약 20년간 지속되다가 그후 40여년 정도에 노령화 추세가 소멸
 - 한국은 40세 이상 농업취업자가 전체의 94%, 60세 이상 농업취업자가 전체의 51% 차지
 -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 실패로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가속
- 선진국일수록 농업취업자의 APC는 완만한 구조를 가지며, 시간 경과에 따라 농업취업자 APC는 완만한 구조를 나타냄
 - 앞으로 한국도 농업취업자 APC가 완만한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며, 따라서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임
- ⇒ 한국 농업구조는 10~2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이행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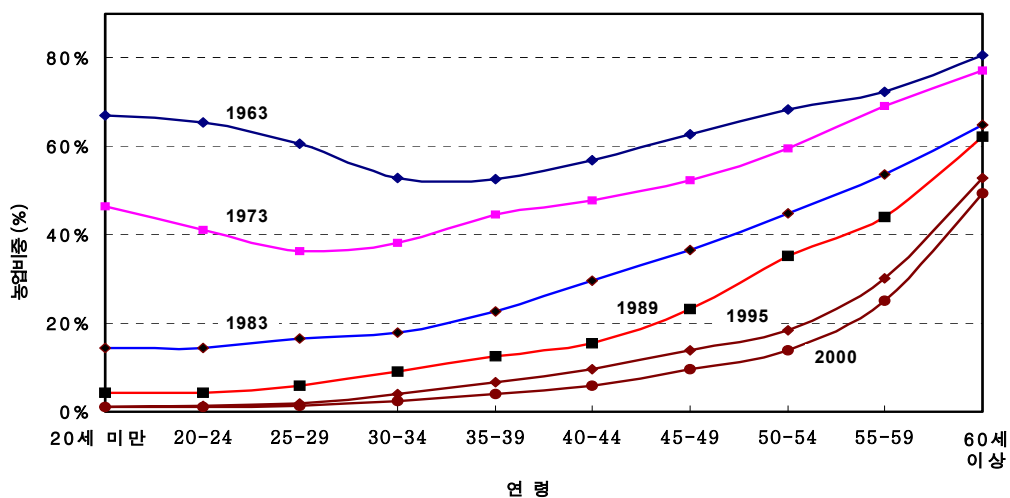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농업 비중의 추이



<표 1> 농업취업자 비중이 40%와 16%에 도달한 기간

국 가	40% 도달 연도	16% 도달 연도	40%→16% 도달기간(년)
영국	1800 이전	1868	70 이상
네덜란드	1855	1950	95
독일	1897	1957	60
미국	1900	1942	42
덴마크	1920	1962	42
프랑스	1921	1965	44
일본	1940 전후	1971	31
한국	1977	1991	14

<그림 2> 한국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APC) 추이



자료: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II.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

1. 농가소득 문제의 현실

□ '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발생

○ UR 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농촌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실시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기간: '92~'98, 총사업비: 42조원)

- 농어촌특별세사업(계획기간: '94~'04, 총사업비: 15조원)

○ 투입자 확충에 힘입어 농업 고정자본은 '94~'02년간 연평균 9% 이상 증가, 농업생산은 연평균 2% 이상 증가

- 농업성장률: ('86~'90) 1.3% → ('94~'02) 2.3%

○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94~'02년간 연평균 1% 하락

- 농산물 실질가격: ('86~'90) 1.4% → ('94~'02) -1.0%

(과일: -1.7% → -5.3%, 채소: 0.7% → -1.7%)

* 농산물 공급 증가의 77%는 국내생산 증가에 기인

○ 환율 상승으로 농업용품 실질가격은 '94~'02년간 연평균 1% 상승

- 농업용품 실질가격: ('86~'90) -5.7% → ('94~'02) 1.0%

○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호당 실질 농업 소득은 '94~'02년간 연평균 1.7% 감소

- 실질 농업소득: ('86~'90) 6.9% → ('94~'02) -1.7%

⇒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파생되는 소득 문제 및 지역 문제를 풀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 경쟁력 향상의 과정에서 농산물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

<표 2> 연도별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추이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국가예산 (억원, A)	329,295	421,835	594,011	742,225	910,539	981,198	1,109,162	1,155,118
농림예산 (억원, B)	27,338	48,360	76,151	81,541	78,939	83,649	88,100	92,852
B/A(%)	8.3	10.4	12.8	11.0	8.7	8.5	7.9	8.0

자료: 농림부, 『예산개요』 각년도.

주: 일반+재특+농특+국특+책특 순계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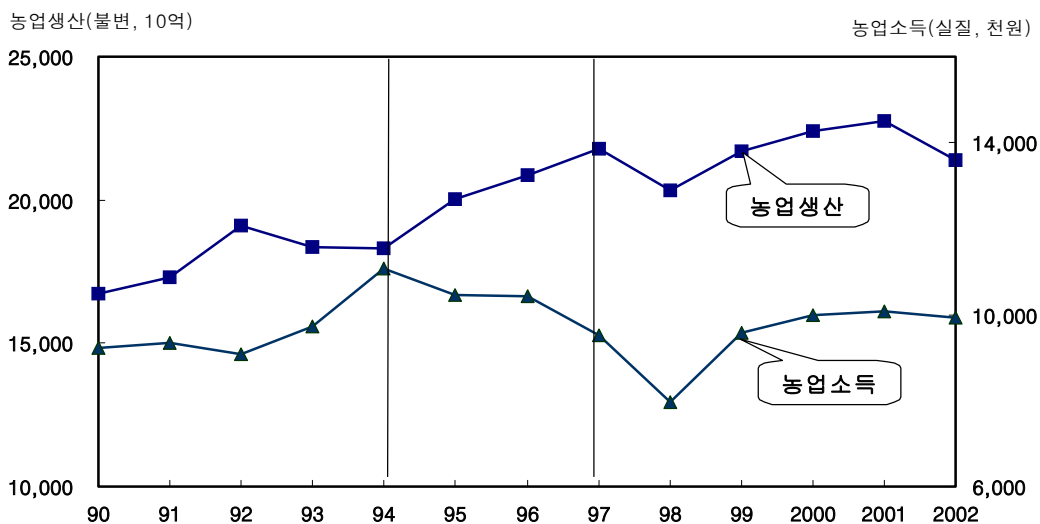
<표 3> 42조 + 15조 사업 투융자 실적('92~'02)

구 분	총투자규모		실제투자	비중	실제국고지원
		비중			
계	594,809억원	100%	349,294억원	100%	291,601억원
국 고 지 원	466,400	78.4	291,601	83.5	291,601
- 국고보조	282,401	47.5	282,401	80.9	282,401
- 국고융자	183,999	30.9	9,200*	2.6	9,200
지 방 비	57,693	9.7	57,693	16.5	-
농어가자부담	70,716	11.9	-	-	-

주: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92~'98), 15조 농어촌특별세사업('94~'04)

* 국고융자금의 5% 이차보상 추정액임.

<그림 3> 농업생산과 농업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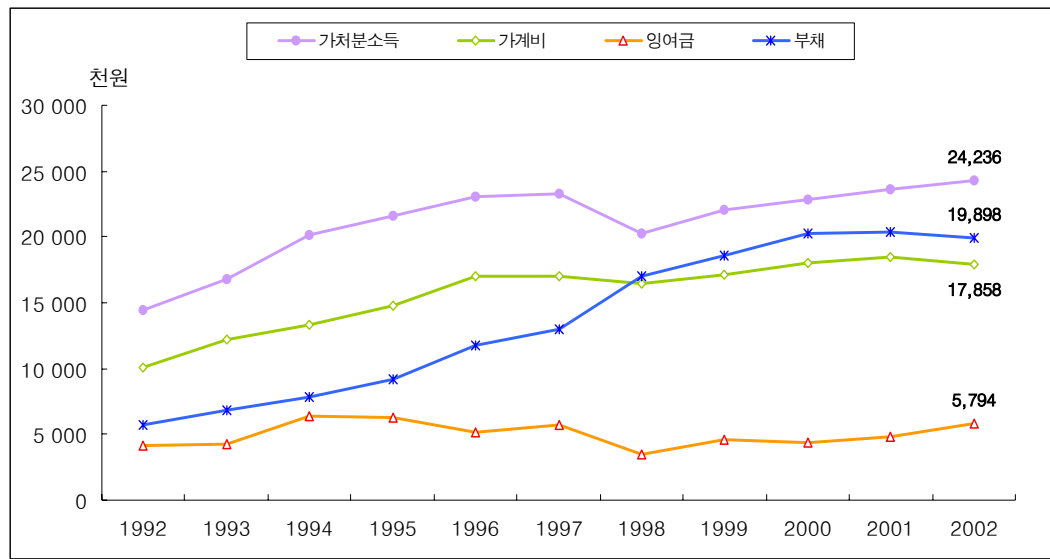
□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의 이질화 심화

- 영세농은 '94년 이후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대농계층의 농업 소득은 증가 추세
 - '94~'02년간 호당 농업소득(명목) 변화를 보면, 경지규모 0.5ha 이하 농가의 소득은 5% 감소, 3~5ha 농가의 소득은 11% 증가, 5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44% 증가
- '94~'02년간 농업소득(명목)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하는 농가 33%,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농가 26%가 공존
 - '94~'02년 사이에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1인당 소득격차가 5.5배에서 7.1배로 확대
 - * 도시가구의 '94~'02년간 최상·최하위 소득격차 4.4배 → 5.4배

⇒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

<그림 4> 농가경제 주요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4> 농가소득 구성

단위: 천원, %

	1992	1995	1998	2000	2001	2002
농가소득	14,505 (10.7)	21,803 (7.3)	20,494 (-12.7)	23,072 (3.4)	23,907 (3.6)	24,475 (2.4)
농업소득	7,356	10,469	8,955	10,897	11,267	11,274
농외소득	4,424	6,931	6,976	7,432	7,829	8,140
이전수입	2,726	4,403	4,563	4,743	4,811	5,060

주: ()는 전년비임

<표 5>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연평균 증감율별 농가분포('98~'02)

단위: 호수, (%)

	-5% 이하	-5~0%	0~5%	5~10%	10% 이상	합계
농가소득	560 (23.9)	371 (15.8)	363 (15.4)	375 (16.0)	679 (28.9)	2,348 (100.0)
농업소득	783 (33.3)	340 (14.5)	351 (14.9)	257 (11.0)	617 (26.3)	2,348 (100.0)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2. 부채 문제의 실상

□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상환유예와 금리인하에 의존하는 부채 대책의 한계

- 최근 5년간('98~'02년)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22.4%나 됨
- '02년 현재 부채비율(부채/자산)이 40%를 넘는 경영위기 농가가 12%나 되고, 이 중 41%(총농가의 5.2%)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이 가계수지 적자 상태
- 부채대책의 확대로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나 '04년에만 6,600억원 소요될 전망
 - '02년까지 추진된 부채대책에 2,000억원, '03년 정책자금 대책에 1,600억원, 상호금융 금리인하 등에 3,000억원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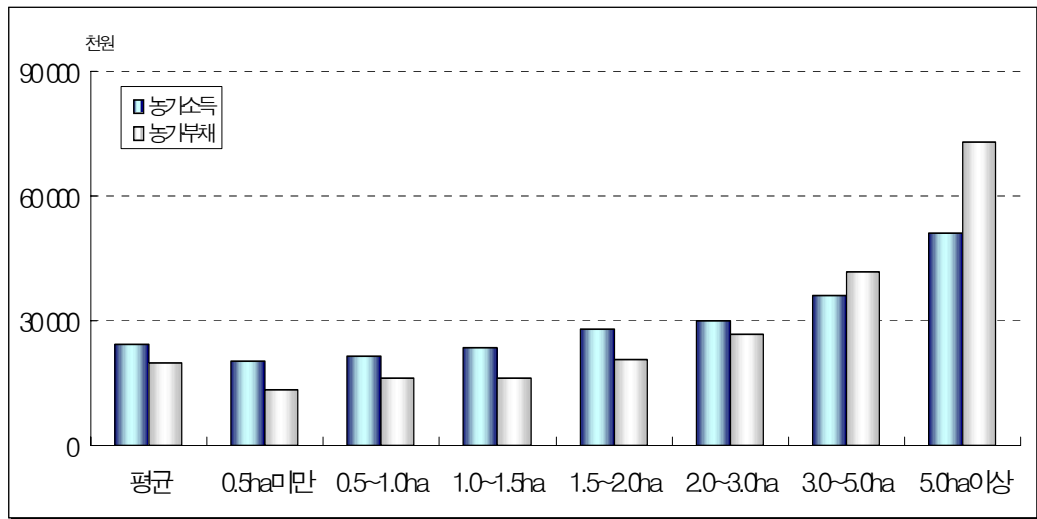
⇒ 상환유예와 금리인하로는 부채가 심각한 농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무차별적인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대책은 소수농가만이 수혜대상으로 소득분배 왜곡과 재정 낭비 초래

- '00~'02년간 정책자금은 1.4% 농가에게 20.8% 자금이 지원되고,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2.7% 농가에게 12.7% 자금이 지원되어 부채대책의 혜택이 소수농가에 집중
- 소득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매우 건전한 농가(총농가의 25%)에 대해서도 위험관리를 위한 부채대책이 필요

⇒ 농가의 경영 상태에 따른 차별적 부채대책이 필요

<그림 5> 경지규모별 소득과 부채



<표 6> 부채증감규모('98~'02)와 부채비율별('02) 농가분포

구 분	'02년 말 부채비율(부채/자산)				계
	20% 미만	20~40%	40~70%	70%이상	
부채 감소 농가	932 (54.8)	93 (25.7)	38 (21.8)	20 (18.2)	1,083 (46.1)
1,000만원 이상	264 (15.5)	45 (12.4)	12 (6.9)	8 (7.3)	329 (14.0)
200~1,000만원	334 (19.6)	38 (10.5)	19 (10.9)	7 (6.4)	398 (17.0)
200만원 미만	334 (19.6)	10 (2.8)	7 (4.0)	5 (4.5)	356 (15.2)
부채 증가 농가	770 (45.2)	269 (74.3)	136 (78.2)	90 (81.8)	1,265 (53.9)
200만원 미만	423 (24.9)	14 (3.9)	4 (2.3)	3 (2.7)	444 (18.9)
200~1,000만원	212 (12.5)	59 (16.3)	23 (13.2)	8 (7.3)	302 (12.9)
1,000만원 이상	135 (7.9)	196 (54.1)	109 (62.6)	79(71.8)	519 (22.1)
계	1,702 (100.0)	362 (100.0)	174 (100.0)	110 (100.0)	2,348 (100.0)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이하 표에서 동일.

<표 7> 부채 상환능력 지표별 농가분포

단위: %

연도	단기 지급능력 부족 농가			지급능력 양호	합 계
	경영수지 적자	가계수지 적자	원금상환능력 적자		
1997	1.2	26.5	35.2	64.8	100.0
1998	8.8	40.2	49.9	51.1	100.0
1999	2.0	32.4	40.5	59.5	100.0
2000	3.3	30.5	38.3	61.7	100.0
2001	3.8	24.5	31.0	69.0	100.0
2002	4.7	22.5	30.3	69.7	100.0

3. 농업경쟁력의 실상

□ 우리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크지만 경영비는 낮음

- 수입 쌀 가격(관세 5% 부과 후 3.9만원)보다 국내 쌀 가격(15.5만원/80kg)은 4배 높으나, 평균경영비(4.7만원)는 20% 정도 높은 수준
 - 쌀 생산농가의 47%는 경영비가 수입 쌀 가격보다 낮고, 대부분의 농가는 쌀 가격이 50% 하락하여도 경영비 보상
- 수입 고추 가격(관세 50% 부과 후 3,080원/kg)보다 국내 고추 가격(5,138원/kg)은 67% 높으나, 평균경영비(1,854원/kg)는 40% 낮은 수준
 - 고추 생산농가의 79%, 마늘 생산농가의 81%는 가격이 50% 하락하여도 경영비 보상

⇒ 단위면적 당 농업소득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면 경영규모 확대로 수익성과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

* 경영규모 확대는 비용절감 수단보다 소득증대 수단으로 중요

< 참 고 >

생산비 = 직접생산비 + 간접생산비

직접생산비 = 종묘비 + 비료비 + 농약비 + 영농광열비 + 기타재료비
+ 농구비(감가상각비 포함) + 영농시설비(감가상각비 포함)
+ 수리비 + 축력비 + 노력비 + 위탁영농비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경영비 = 생산비 가운데 실제로 지불되지 않는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를 제외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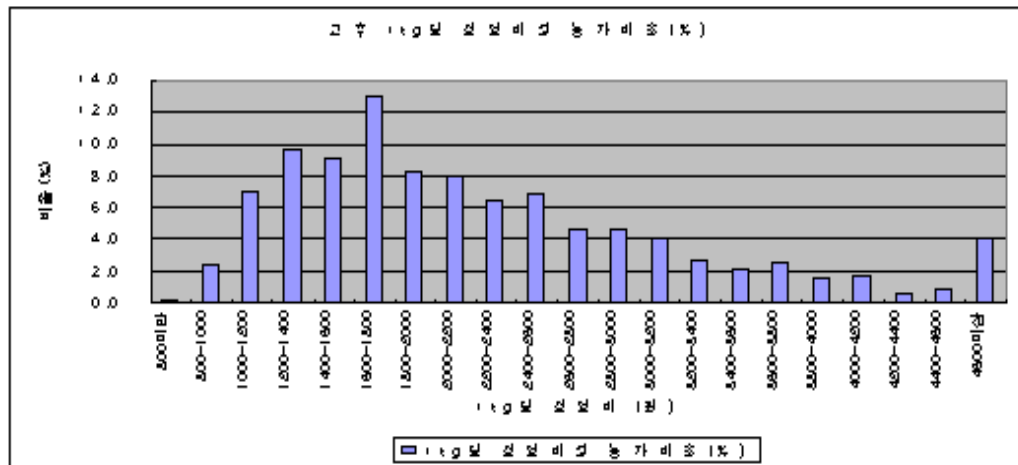
<표 8> 벼농사 경영규모별 소득 분석(2002년)

단위: 천원, %

구 분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5.0	5.0ha 이상
10a당 조수입	1,057 (100)	1,054 (99.7)	1,040 (98.4)	1,070 (101.2)	1,076 (101.8)	1,068 (101.0)	1,071 (101.3)	1,112 (105.2)
10a당 생산비	572 (100)	535 (93.5)	527 (92.1)	513 (89.7)	521 (90.6)	524 (90.6)	525 (91.8)	494 (86.4)
직접생산비	323	288	264	255	247	243	231	205
- 농 구 비	101	91	83	77	76	72	67	49
- 노 력 비	134	124	113	109	106	105	97	86
간접생산비	249	247	263	258	274	281	294	289
10a당 경영비	269 (100)	267 (99.3)	274 (101.8)	272 (101.1)	292 (108.5)	283 (105.2)	300 (111.5)	329 (122.3)
10a당 순수익	485	519	513	557	555	544	545	617
10a당 소득	788 (100)	788 (100)	766 (97.2)	799 (101.4)	783 (99.4)	785 (99.6)	771 (97.8)	782 (99.2)
80kg당생산비	95.7 (100)	91.8 (95.9)	88.5 (92.5)	84.6 (88.4)	85.5 (89.3)	83.6 (87.3)	84.0 (87.7)	83.1 (86.8)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그림 6> 고추 경영비 분포와 농가 비율(2002년)



주: 경영규모별 고추 1kg 당 경영비: 0.1ha미만 2,949원, 0.1~0.3ha 2,259원, 0.3~0.5ha 2,193원, 0.5~1.0ha 2,127원

자료: 농산물생산비통계 원자료 분석.

□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 안전성, 마케팅에 따라 결정되는 추세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로 가격차별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품질경쟁력의 가능성 증대
 - '03년 현재 일반쌀(2,300원/kg), 친환경쌀(3,000원), 무세미쌀(4,000원), 완전미(4,500원), 기능성쌀(6,000원)
-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급격히 확대되고, 안전성이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중요
 - 등급간 가격 차이('93→'02): 사과 2.3 → 3.1배, 배 2.6 → 3.5배
- 소비지 유통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품 자체의 경쟁력보다 적품·적기·적소·적량공급 등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추세
 - 농산물 수출입에서도 가격경쟁력보다 마케팅 능력이 좌우

⇒ 소비자와 소비지유통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차별화와 산지유통 체계의 확립이 농업발전의 핵심 요소

* 농협의 개혁은 산지유통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

<표 9> 소득계층별 쌀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2003년)

단위: 응답수(%)

소득 계층 (월 소득)	고려요인						계
	가격	맛	안전성	편리성	영양가	기타	
200만원미만	43 (43.0)	31 (31.0)	17 (17.0)	6 (6.0)	2 (2.0)	1 (1.0)	100 (100.0)
200만원대	36 (26.7)	63 (46.7)	25 (18.5)	4 (3.0)	5 (3.7)	2 (1.5)	135 (100.0)
300만원대	28 (26.7)	46 (43.8)	25 (23.8)	5 (4.8)	1 (1.0)		105 (100.0)
400만원이상	19 (15.4)	70 (56.9)	28 (22.8)	4 (3.3)	2 (1.6)		123 (100.0)
계	126 (27.2)	210 (45.4)	95 (20.5)	19 (4.1)	10 (2.2)	3 (0.6)	463 (100.0)

<표 10> 소득계층별 쌀 구입가격 분포

단위: %

소득 쌀가격	200만원미만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 이상
~42천 원	9.4	3.7	3.9	2.5
42~45천 원	26.0	19.4	12.7	3.3
45~48천 원	30.2	30.6	29.4	16.4
48~51천 원	20.8	22.4	20.6	18.0
51~55천 원	7.3	14.9	23.5	28.7
55~60천 원	3.1	6.0	7.8	21.3
60~66천 원	1.0	2.2	2.0	6.6
66천 원 ~	2.1	0.7	0.0	3.3
	100.0	100.0	100.0	100.0

<표 11> 쌀 시장 개방시 수입쌀 구입의향

구 분	응답수	비중(%)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않겠다	269	44.5
가격이 국내 쌀보다 싸면 품질이 나빠도 구입	6	1.0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	56	9.3
가격이 국내 쌀보다 싸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	263	43.5
무조건 수입 쌀을 구입	1	0.2
기타	9	1.5
(무응답)	(4)	
합 계	606	100.0

자료: 이계임 외, 『쌀 소비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4. 농업구조 문제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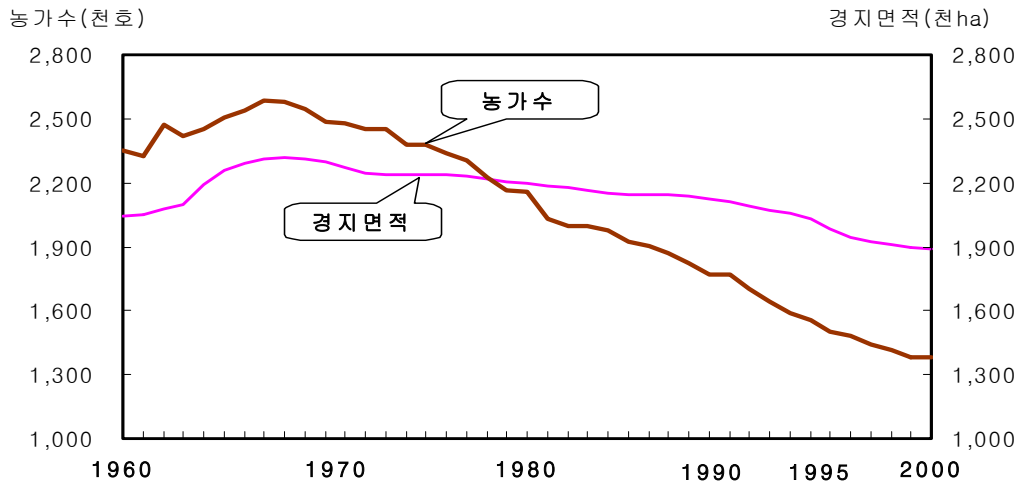
□ 농가 수는 영세농층에, 생산은 상층농가로 집중 추세

- 일부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 생산자원이 집중되는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
 - 쌀 3ha 이상 농가 : '00년 3.8%(40.8천호)가 20% 생산('90년 7% 생산)
 - 시설원예 2천평 이상 : '00년 10.5%(7.7천호)가 47% 생산('90년 26% 생산)
 - 한우 20두 이상 농가 : '00년 8.1%(1.5천호)가 55% 생산('90년 14% 생산)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농가가 영세농층으로 퇴적되어 0.5ha 이하 농가가 총농가의 32%를 차지
 - 영세농은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영주의 94%가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전직이 어려움

⇒ 농업구조 조정은 진행되고 있으나 영세농층의 퇴적이 지속될 전망

* 농업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영세농층에 대한 대책이 긴급

<그림 7> 농가 수 및 경지면적 추이



<표 12>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천호, %

규모별 연도	0.1ha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이상	계
1990년	15 (0.8)	468 (26.5)	544 (30.8)	543 (30.7)	130 (7.3)	44 (2.5)	1,767 (100.0)
1995년	16 (1.1)	417 (27.8)	432 (28.8)	418 (27.8)	123 (8.2)	70 (4.7)	1,501 (100.0)
2000년	30 (2.2)	410 (29.7)	379 (27.4)	352 (25.4)	114 (8.2)	85 (6.1)	1,383 (100.0)

<표 13>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두수) 누적분포

단위: %

연도 경영규모	1990		1995		2000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논 3ha 이상	1.2	6.2	2.8	14.8	3.8	20.0
밭 2ha 이상	1.6	12.6	2.5	18.0	3.2	24.0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연도 경영규모	1990		1995		2000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젖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자료: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 영세농과 고령농의 실상

- 영세농·겸업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경영비는 보상되므로 앞으로도 영세농의 퇴적현상이 지속될 것임
 - '02년 쌀생산 영세 자작농의 10a 당 소득은 75.7만원으로 대농의 임차지 소득(55.4만원)보다 높으며, 쌀가격이 50% 하락해도 28.7만원의 소득 가능
- 영세농의 존재가 농업생산의 효율화 또는 규모화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지 않음
 - '00년 현재 0.5ha 미만 쌀 농가의 호수 비중은 44%이지만 경지면적 비중은 13%에 불과
- 경영규모 계층 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정책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
 - '98~'02년 동안에 3ha 이상 농가 중 연간 7%는 규모 축소, 1ha 이하 농가 중 연간 9%는 규모 확대하여 계층 이동
- '00년 60세 이상인 고령 경영주의 65%가 '10년경까지 자연은퇴하여 상층농으로 생산 집중이 가속될 전망
 - '00년 현재 60세 이상 경영주 비율 51%(보유농지 65.8만ha), 70세 이상 비율 16%(보유농지 15.8만ha)

⇒ 탈락농가 및 은퇴농가의 농지가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에 모아질 수 있음

* 영세농의 탈농 촉진보다 농지의 자유스런 유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표 14> 경영주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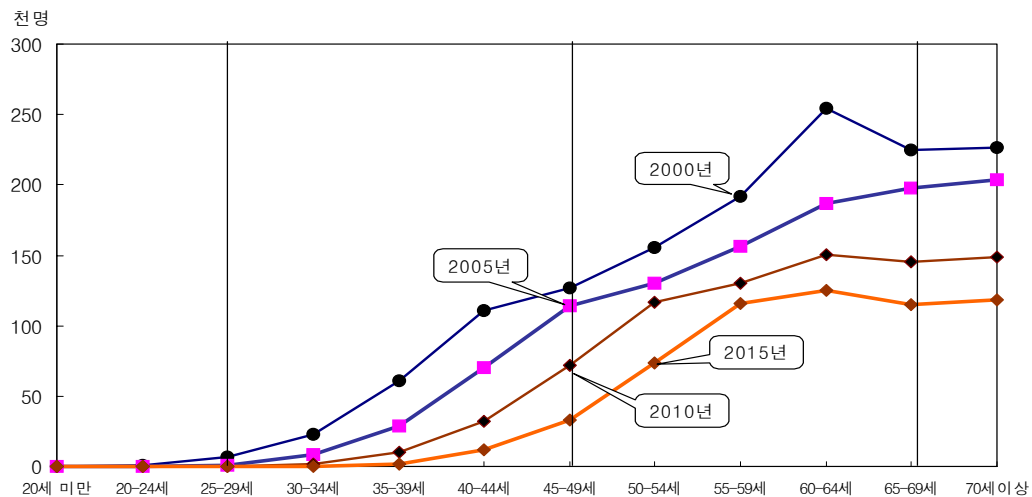
단위 : %

	0.5ha미만	0.5~1ha	1~2ha	2~3ha	3~5ha	5ha이상	합 계
39세이하	2.1	1.6	1.5	0.6	0.4	0.2	6.5
40~49세	4.7	4.0	4.3	1.9	1.4	0.6	17.1
50~59세	6.7	6.4	7.2	2.8	1.5	0.5	25.1
60~69세	10.6	10.5	9.9	2.5	0.9	0.3	34.8
70세이상	8.1	5.1	2.7	0.4	0.2	0.1	16.5
합 계	32.2	27.7	25.7	8.3	4.5	1.7	100.0

주: 경지 있는 농가만 집계(1,369,298호)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8> 연령별 농업경영주의 전망



단위: 명

연 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합 계
2000	7,270	84,246	237,737	348,067	254,390	225,095	226,663	1,383,468
2005	1,220	36,997	183,551	286,621	186,582	198,031	203,292	1,096,295
2010	146	12,144	104,181	246,470	150,474	145,189	149,069	807,674
2015	124	1,989	45,334	188,937	124,699	114,958	124,012	600,053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5. 시장개방의 영향

□ UR 농산물협상의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감소됨

- UR 타결 당시에는 농업 붕괴 우려 등 불안감이 팽배하였으나,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94~'02년간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5% 수준으로 총공급 증가의 23%에 그침

□ 시장개방시 국내외 가격차는 크고(고관세 품목) 품질차가 적은 쌀, 고추, 마늘에서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

- 쌀과 고추, 마늘은 관세인하로 30~4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여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10년까지 쌀 소득은 1.3~4.1조원, 고추 소득이 3.2~4.5천억원, 마늘 소득이 1.2~5.6백억원 감소 추정(선진국 조건으로 개방시)

□ 관세가 낮고 품질별 가격차가 큰 농산물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 해제로 10~3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지만 등급간 가격 차이가 200% 이상이므로 품질고급화로 극복 가능
- 축산물은 관세인하로 10~15%의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품질간 가격 차이가 50%(쇠고기) 이상이므로 품질고급화로 극복 가능

⇒ 시장개방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에 대한 소득 대책이 긴급

<표 15> 시장개방 영향(쌀)

		재배면적 (천ha)	농판가격 (천 원/80kg)	쌀 소득 (10억원)	10a당 소득 (천 원)
2002		1,053	153.7	7,225	686.0
2005		980	153.3	6,944	713.5
2010	개도국	836 (△2.8)	145.7 (△0.7)	5,894 (△2.5)	705.2 (0.3)
	선진국	776 (△3.7)	96.9 (△5.6)	3,175 (△9.8)	409.1 (△6.3)

주: ()안은 2002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표 16> 시장개방 영향(양념채소, 특작)

◎ 선진국 대우, 평균감축률 60% 적용시

	관세감축(%)		재배면적(ha)			10a당 소득(만원)		
	2004	2010	2004	2010	증감률	2004	2010	증감률
고 추	270.0	108.0	59,138	44,695	-24.4	88	54	-38.6
마 늘	360.0	144.0	29,505	23,267	-21.1	74	63	-14.9
양 파	135.0	54.0	14,379	17,843	24.1	124	105	-15.3
참 깨	630.0	252.0	37,942	35,163	-7.3	35	34	-2.9
인 삼	222.8	89.1	14,047	12,172	-13.3	178	170	-4.5

◎ 개도국지위 유지, 최소감축률 30% 적용시

	관세감축(%)		재배면적(ha)			10a당 소득(만원)		
	2004	2010	2004	2010	증감률	2004	2010	증감률
고 추	270.0	229.5	59,138	52,189	-11.8	88	81	-8.0
마 늘	360.0	306.0	29,505	26,020	-11.8	74	87	17.6
양 파	135.0	114.8	14,379	17,229	19.8	124	113	-8.9
참 깨	630.0	535.5	37,942	35,163	-7.3	35	34	-2.9
인 삼	222.8	189.4	14,047	12,189	-13.2	178	176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계 결과.

6. 농촌지역 문제의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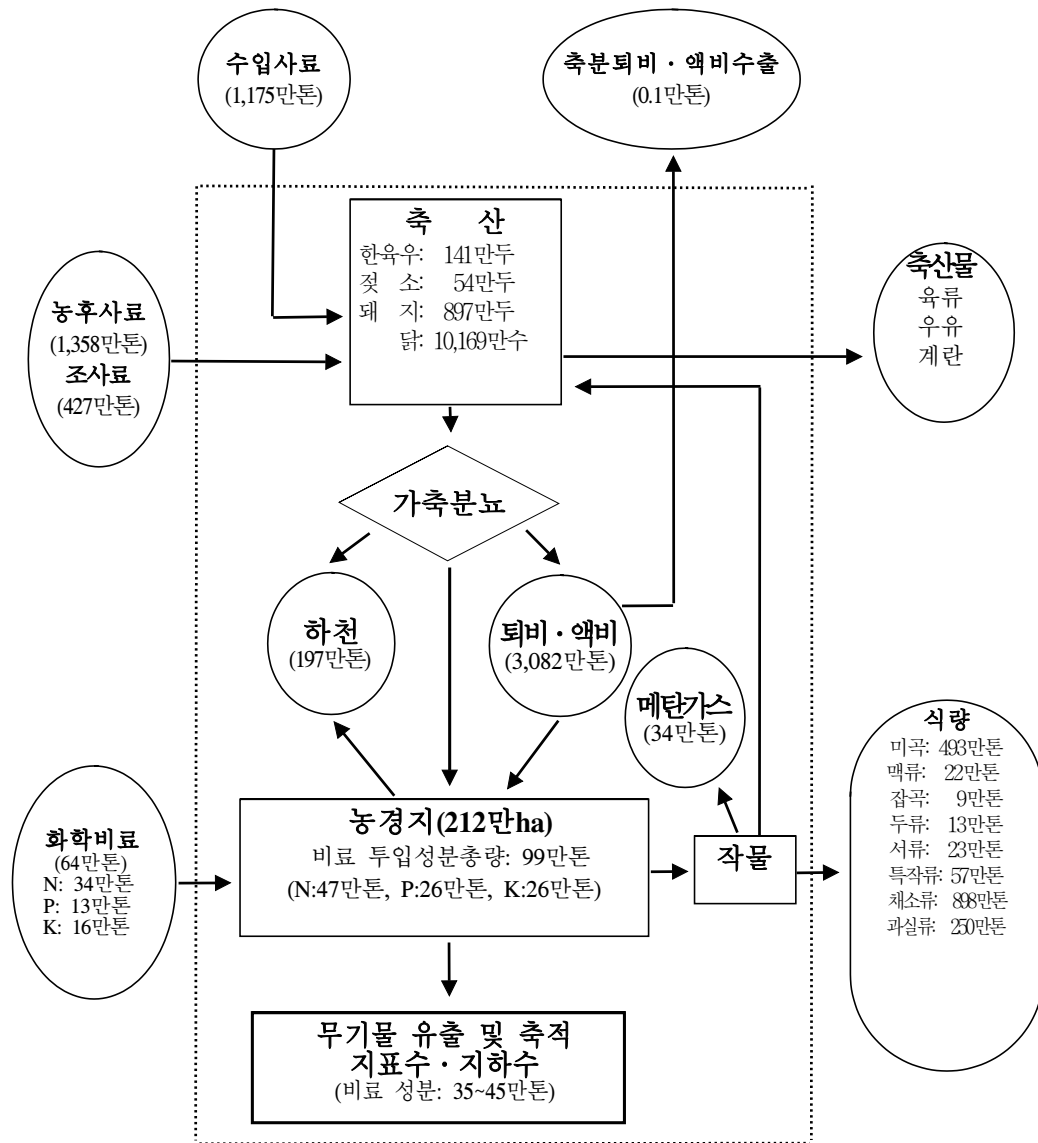
□ 집약 축산과 과잉시비로 농촌지역의 환경부하 증대

-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등을 통한 NPK 비료성분 투입량은 연간 약 99만 톤으로, 질소 86.4%, 인 106%, 칼리 64.4%가 초과 공급
 - 연간 약 35~45만톤의 비료성분이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작용
- 대규모 집약축산으로 총환경부하중 축산부문의 수질오염 기여율(BOD 기준)은 한강 48%, 낙동강 43%, 금강·만경강 50%, 영산강·섬진강 57% 차지

⇒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심의 환경농업정책으로는 농촌의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

- * 지역별, 수계별로 물질순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생산 규모와 농법을 조정하는 정책추진 시급 (물질균형 유지는 다원적기능 유지의 필수조건)

<그림 9> 우리나라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표 17> 4대강 유역의 농업분야 오염 기여율(BOD 기준)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강 · 만경강	영산 · 섬진강
총부하(톤/일)	284.8	385.4	257.1	152.5
비점(톤/일)	80.5	98.0	55.8	57.1
축산(톤/일)	58.2	66.3	71.3	31.0
기여율(%)	48%	42.6%	50%	57%

자료: 환경부

□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훼손

- 도시확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갖추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
- 순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의 무질서한 입지 증가
 - '98~'00년간 발생한 농지전용 16만건의 평균면적은 450평에 불과

⇒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보전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

- * 무질서한 토지 이용은 농촌 경관을 훼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

□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상실될 우려

- 읍·면 인구 비중은 '80년 42.7%에서 '00년 20.3%로 감소
 - 인구 2천명 미만 면이 '85년 9개에서 '00년 170개로 증가하고 1천명 이하인 면도 17개 발생
- 지역농업의 쇠퇴가 농촌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
 -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의 농가 비율이 '90년 57%에서 '00년 39%로 감소

⇒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해 지역농업 발전과 산업구조 다양화가 필요

<표 18> 읍, 면지역 인구 추이(1980-2000년)

단위: 명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국(A)	37,436,315	40,448,486	43,410,899	44,608,726	46,136,101
동 부	21,434,116	26,442,980	32,308,970	35,036,473	36,755,144
읍·면부(B)	16,002,199	14,005,506	11,101,929	9,572,253	9,380,957
읍 지역	4,539,666	4,817,236	3,603,647	3,484,148	3,755,782
면 지역	11,462,533	9,188,270	7,498,282	6,088,105	5,625,175
구성비(B/A)	0.427	0.346	0.256	0.215	0.203

자료: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19>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지역 추이

단위: 개

연도 읍·면 개수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2천명 미만	9	30	97	170	333	470
인구 1천명 미만	2	3	10	17	46	109

주: 2005년 및 2010년의 수치는 현재의 읍·면별 인구 증감 추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표 20> 농촌인구의 연령구조 변화(1960~2000)

단위: 천명, %

구 분	1960			2000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인 구	24,989	6,997	17,992	45,985	36,642	9,343
0-14세(%)	40.6	39.1	41.2	21.0	21.6	18.6
15-64세(%)	55.6	58.4	54.5	71.7	73.0	66.7
65세 이상(%)	3.7	2.5	4.2	7.3	5.4	14.7
노령화 지수	9.7	6.4	10.3	35.0	25.3	78.7

자료: 경제기획원(1963), 통계청(2002).

7. 90년대 농정방식의 한계

□ 선진농가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에 치중

-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하는 선진농가 육성 정책에 중점
- 대다수 농가는 선진농가군에 진입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현실을 간과

⇒ 다수 농가의 소득 문제 발생

- * 농업발전이라는 「산업의 문제」 보다 농가소득이라는 「사람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사업 중심·정부 중심의 농정 추진

- 경쟁력 향상, 수급균형, 농업구조 변화 등이 모두 정부 정책으로 조정될 수 있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지배
- 시장기능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는 메시지 전달
 - 경쟁력 있는 분야, 품목, 시설과 경영체를 선정·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수급균형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잉기대를 형성하여 실망과 불신 초래

- * 정부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시장 및 생산자의 역할 분담을 제시

□ 농가소득 안전장치의 부족과 사안별 대응

- 시장개방과 공급 증가의 피해는 농가에게, 이익은 소비자에게 귀속되어 농가의 격렬한 개방반대운동 발생

⇒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과대포장된 정책지원이 추가되어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농업의 정치논리 지배구조 형성

- * 개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자동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 대응 지양

< 외국 동향 >

□ 세계농업과 농정의 흐름

- 1960~70년: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증산을 도모했으나, 소득문제의 한계 노출
 -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
 - 농업기본법 제정시기 : 독일(1955), 프랑스(1960), 일본(1961)
- 1980년대: 효율주의 농업 한계와 지역정책 대두
 - 생산과잉에 따라 UR 협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
 - 1980년대 초부터 지역농업 유지를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지원대책 대두
- 1990년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대응
 - 농산물 과잉해소, 환경보전을 위한 농법 전환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산
 - 농업보조를 줄이고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 추구

□ 외국의 직접지불제도

-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전에 농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최근 직접지불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 WTO 농업협정 상의 그린박스(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적은 직접지불)나 블루박스(생산제한 아래 직접지불)의 이름으로 허용 보조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농가소득 보전에 활용
 -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당 직접지불 수준은 991 달러 (EU의 1/3, 일본의 1/5, 미국의 1/8 수준)

	농가인구당 직접지불(\$)	농가인구당 국내보조(\$)
미국 (2000)	7,748	11,532
노르웨이 (2000)	5,694	10,926
일본 (1999)	5,215	6,679
EU (1999)	2,324	5,144
캐나다 (1999)	1,506	3,265
한국 (2000)	991	1,436
호주 (2000)	834	983

Ⅲ.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비전

1. 농업 발전의 가능성

□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

-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조건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며, 과수와 화훼 등은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생명공학(BT), 전자공학(IT)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큼

□ 국내 농산물·식품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계속 향상

-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산업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이나 구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 농산물의 내수시장을 국제 비교하면 스위스,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비하여 한국의 농산물 구매시장이 큼
- 앞으로 국민소득 증가, 탈산업사회 진입 등으로 농산물(식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

□ 아시아권을 비롯한 풍부한 해외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존재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경제력 향상으로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최근 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아갈 새로운 주체가 가시화

- 농촌 현장에는 첨단기술·정보·지식을 응용하는 신지식 벤처농업인이 지역농업의 리더그룹으로서 변화를 선도
-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농기업(agri-business)이 미래농업의 새로운 경영주체로 부각

□ 농업기술 혁신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전문화가 더욱 진전

-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및 영농의 기계화·시설 자동화는 고령농업인보다는 청장년 농업경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
- 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은 규모화된 농가의 지속적인 규모확대의 동기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경영규모를 늘릴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영 능력이 우수한 전업농 중심의 인력 구조로 농업이 재편될 수 있음

<표 21> 한국 농업의 SWOT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 우수한 인력과 농업인의 도전 정신 ·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은 편	·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 고지가, 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 · 유통·물류시스템의 비효율성 ·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국민소득 증가와 식품소비 고급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 가능성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수출시장 확대 · 첨단기술 개발과 농업적 활용 가능성 ·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의 출현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특히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 · 일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 WTO의 국경보호 조치 삭감 요구

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

(1) 규모화와 코스트 혁신

□ 특징

- 생력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력비 절감과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고정비용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총소득 증대를 추구함
- 개별농가로 구성된 작목반, 협동조합의 사업연합 등 조직화를 통하여 비용 절감을 추구함

□ 유형과 우수사례

① 생력화 기술 도입

- 내용: 신기술, 시설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규모 확대를 통해 총소득을 증대함
- 사례: 벼 직파재배, 저수고 과수원(사과, 배), 기계화·시설자동화(시설 원예, 축산) 등

② 조직화를 통한 규모 확대

- 내용: 개별농가 또는 사업체의 조직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규모화에 의한 공동이익을 추구함
- 사례: 생산조직, 작목반,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업연합 등

(2) 상품 혁신

□ 특징

-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채용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수확후 관리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임
- 특정한 소비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함

□ 유형 및 우수사례

① 생산 차별화

- 내용: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함
- 사례: 대체작목(참다래, 파프리카, 복분자, 허브, 야생화 등)
기능성 식품(장생도라지, 상황버섯, 항위염계란 등)
친환경농업(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미생물농법 등)

② BT 산업화

- 내용: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식품을 개발함
- 사례: 동충하초, 풍란조직배양, 향기나는 호접란, 발아현미 등

③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 내용: 가공·예냉·저장·포장 등으로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임
- 사례: 브랜드 농산물(특히 쌀 브랜드, 한우 브랜드)

(3) 마케팅 혁신

□ 특징

-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임
- 계열주체 중심의 계약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유통업체에 안정 공급을 통해 수취가격을 제고함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마케팅을 주도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

□ 유형 및 우수사례

① 농가형 e비즈

- 내용: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회원제 판매를 통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함
- 사례: 농업인 인터넷홈페이지(B2C), 농산물 포털사이트 등

② 기업형 계열화

- 내용: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계열주체가 관리, 철저한 품질 관리와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
- 사례: 농업법인, 축산계열화사업(양돈, 양계) 등

③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 내용: 공동선별·공동계산·브랜드화를 체계화하고 저급품은 가공용으로 수요를 창출함
 - ※ 공동계산(pooling): 일정기간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품질등급별로 동일한 가격으로 정산하는 판매방식
- 사례: 공동판매, 매취사업, 공동계산제 등

(4) 서비스 혁신

□ 특징

- 농산물 이외에 여가·휴식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소비자 및 도시민이 농산물 생산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신뢰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
- 농촌관광(그린투어)과 특산품 판매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함

□ 유형 및 우수사례

① 마을공동형 도농교류

- 내용: 마을 공동으로 도시민에게 농업·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직거래로 발전함
- 사례: 녹색농촌체험마을 44개소(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 27개소(농촌진흥청), 아름마을 23개소(행정자치부) 등

② 개별경영형 그린투어

- 내용: 개별경영체가 사업주체로서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경관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민박 및 특산물 판매 등으로 소득을 추구함
- 사례: 관광농원(농림부 지원, 300여개소), 팜스테이(농협 지원, 100여개소) 등

3. 농업·농촌의 비전

비전이란 국가가 요구하는 가야할 방향, 국내외 여건상 갈 수밖에 없는 방향,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관련된 경제주체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농가, 소비자, 도시민의 이익이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됨

- 소득 증가로 식품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 품질과 안전성에 따른 가격 차별 확대(농산물의 사치품화) → 이러한 소비자 요구 충족으로 농가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이익 증대
- 여가와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 → 농촌지역의 경관·환경·자연에 대한 수요 충족(농촌지역과 농산물의 문화상품화) → 농가와 농촌주민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도시민의 후생 증대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 → 농가와 농촌을 위한 납세부담 수용 → 농가소득과 농촌지역개발 지원 가능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농촌의 경관 및 환경보전기능 구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획득

□ 시장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영체가 공존함

- 시장개방 충격의 일정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생산자의 자구적 노력으로 극복하는 역할분담 체계가 확립
-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농가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선진농가 중심의 농업구조 형성
 - 부실 경영체의 퇴출, 고령농가의 은퇴가 가속되어 경쟁력 있는 주체에 생산자원이 집중되고(규모화),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이 집중됨(전문화, 특화)
- 영세농·겸업농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전업농과 공존하면서 농촌 경제사회를 구성함
 -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농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중요한 노동력 공급 기능 수행

□ 신수요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이 마련됨

- 현재의 개별판매에서 전업농 작목회 중심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 브랜드가 점차 확대되고 주변 농가를 흡수하여 조합단위 조직으로 발전
- 지역농협의 (공동)출자와 지자체, 중앙회, 기업 등의 우선출자로 산지유통 전문회사가 발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 소비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유통업체 등과 안정적 계약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농가 혹은 작목반과 계약생산 관계 발전
- 공동계산 혹은 매취 후 이용고 배당방식이 일반화되어 품질관리와 이익환원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
 - 쌀은 RPC 중심으로 계약재배 및 공동계산제가 일반화되고 대형화되어 전문가공유통법인화됨
- 산지유통전문회사는 썬키스트와 같은 기업으로 발전하여 동북아농업의 분업체계 속에서 고소득계층 5%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담당
- 현재의 도매시장은 저온저장 및 선별포장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로 개편되어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효율이 극대화됨

□ 주거·휴양·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가 재발견됨

- 전국이 격자형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마을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농촌의 공간적 불리성이 크게 해소됨
- 도시민의 의식, 가치, 생활의 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역의 자연, 문화, 농업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지만, 지역의 자연·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함
- 농촌인구 감소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지역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나타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2015년)까지 늘어나 농촌지역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됨
- 주거는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중심도시에서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마을-소도읍-중심도시」라는 전통적 정주체계에서 「마을-중심도시」 직결형 체제가 늘어나는 등 정주체계가 다양화될 것임
- 농촌에도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가 발달됨에 따라 “계획없이 이용없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상품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중되어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휴양공간이 됨

□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됨

-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으며, 대체로 문화·보건·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리성을 보완하는 농촌형 복지체계가 확립됨
 - 마을에서 일상의료서비스, 중심도시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됨
 - 농촌지역의 공간적, 경제적 불리성을 보완하는 사회보험·보건혜택과 보육·교육서비스가 보장됨

4. 농정 기조와 정부 역할

□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 산업의 발전은 생산자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책은 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90년대 농지유동과 경영규모 확대, 시설농업 발전도 대부분 농가의 주도적 노력의 결과임
- 정부는 선진농가 육성보다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함
 - 농가를 위한 최소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성, 국민을 위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
 - * '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 보다 '정책의 선택과 집중' 이 필요

□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수급조정

-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개입을 배제
 - 분야별, 품목별 대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양산시켜 설계주의 농정으로 회귀할 우려
 - 개방시대에 인위적 생산조정은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손실
 - * 쌀 정가수매제도, 채소류 최저보상가격제도, 과수 폐원보조사업 등을 폐지
- 특정농가와 조직에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를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지도록 함

□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목표를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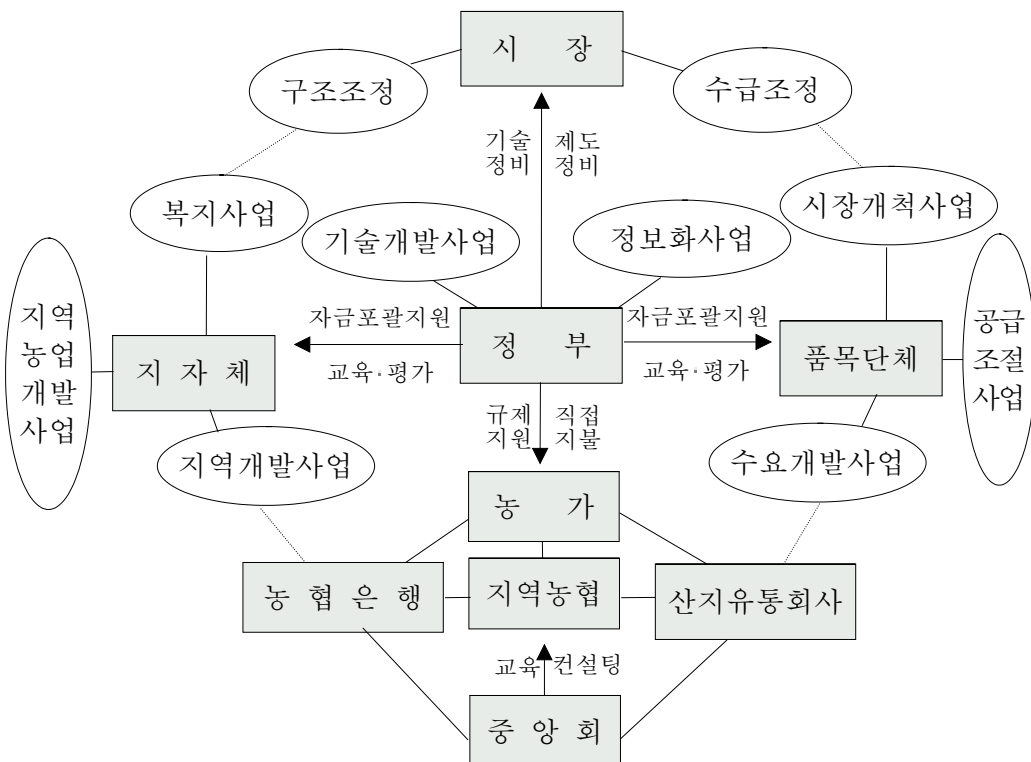
- 시장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경제의 안정 지원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
 -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일관된 목표소득지지체도를 유지
 - 직접지불 지급규모는 시장개방 폭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변화
 - * ‘소비자부담형 농정’에서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
- 복지지원 수준을 명시하여 기초생활 안전보장
 - 농가와 농촌주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지원 수준 제시

□ 지자체 및 품목단체와의 파트너십

- 정부는 ‘정책의 개발자’ 및 ‘재원의 관리자’를 통한 사업추진 역할에 충실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규모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 사업 추진은 시범사업에 국한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품목별 단체가 결정
 - 사업 대상지역, 투자 내용,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품목별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결정
-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및 지역별 차등보조 방식 도입
 - 농촌개발과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하나의 종합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 조건불리지역과 같이 낙후 농촌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
- 품목별단체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신수요 개발비를 포괄 지원

< 새로운 농정시스템과 역할 분담 >

- 시장의 기능, 지자체 및 품목별 단체의 역할, 지역농협의 기능을 존중하고 역할을 분담
-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역할 집중
 - 시장개방의 과도한 충격 분담
 - 경영의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정비와 지원
 - 진입과 퇴출의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장벽 제거
 -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사업
 - 농산업 지원시스템 정비
 -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생산 규제와 보상
 -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참 고 문 헌

- 김창길·김정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농림부,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4.2.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정부 농정백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대응』, 2003.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 설광언, 『농업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농수산분야)』,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20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2003.

토론자료

-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47
- 김영래 (충북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50
-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53
-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55
-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 58
- 허병석 (두산R&D센터 식품연구소장) / 62

< 토론 요지 >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연구위원

□ 차별화 없는 지원은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 UR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 총 5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업구조조정 대책은 농업인프라 구축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특히, 1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융자지원의 대부분은 부채로 남아 오히려 농업·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 모든 농업·농촌·농민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수익률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농업내부에서 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 한·칠레 FTA 이후 농업·농촌 대책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 119조원이라는 전체 예산규모만 강조되고 있을 뿐 농업·농촌 대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 도농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 현실인데 반해 정부의 계획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도시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하고 있어 도시민이나 농민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 차별화 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 등을 쓰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고 선택과 집중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 국민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농업·농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6년 5.98%에서 2002년 4.71%로 낮아지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농가인구는 571만 명에서 359만 명으로 200백만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농가인구의 비중도 13.1%에서 7.5%로 감소했다.
- 이와 같은 추세를 거스르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를 앞당겨 가능한 빨리 적정수준의 균형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 국민경제와 생활에서 농업·농촌이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알맞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속히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 이 때, 농업·농촌에는 산업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식량안보, 국민건강, 환경보호, 재난방지, 휴양공간,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또한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은 차별화에 있다.

—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위해서 쌀의 자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국내생산은 유지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고령농업인구의 부양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며 이의 비용도 국민복지차원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

— 농업구조조정지원은 능력 있는 경영체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지원분야와 사업을 인위적으로 지정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며 농민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구조조정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실과 책임은 철저하게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 농업·농촌만을 생각하는 문제해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 농업계 내부의 시각으로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신들만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 비농업계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문제의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지난해 한경연의 세미나에서 논의된 농업·기업간 대화채널 구축, 농업 기술 관련 R&D 기금설립, 포상제도 운영, 영농기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일사일촌, 일사일품 운동 등에 대한 구체안 마련이 필요하다.

< 토론 요지 >

생산업자(Producer)마인드로부터
제조업자(Maker)마인드로의 전환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김영래 교수

농업 경제의 전문가도 아닌 토론자로서는 사실 접근이 어려우므로 비교적
국외자의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이 토론에 나오기 전에 농민 지도자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의 현실적인 문제는 농가부채의 문제이다.

그 동안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10명중 9명은 불량채무자로서 신용이 없어
더 이상 농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남은 1명은 농가지원자금을 받지 않
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농협에는 대출하지 않은 농
자금이 흘러넘치지만 정작 농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은 빌릴 수가 없는 실
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농가부채 탕감을 요구하자니 다른 산업의 종사자와의 형평에 어긋
나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다.

둘째, 농업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다.

농산물 가격이 인건비, 농기자재 값, 이제는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종
자값 등의 상승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유통과정
의 복잡성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정부는 농민 살리기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때에도 칠레와의 FTA협정에서도 농민들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 고려가 없었다. 오직 선거 때에만 농업지원자금을 뿌리
거나 되지도 않을 농가 부채 탕감 등의 선심 정책을 남발하다가 선거가 끝
나면 다음 선거가 오기까지 잊고 사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의 처사라고 한다.

넷째,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이다.

당장 일터로 나갈 사람이 없고 이번같이 100년만의 폭설이 내려도 당장 임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가피해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농민 스스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알뜰한 정치 선심에 우선 급한 대로 주는 돈을 받아쓰며 연명하다 보니 부채만 늘고, 차라리 그때 그 농자금을 거절하여 스스로 살길을 모색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았을 까 후회한다고 했다.

그럼 농민 스스로 자립의지는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현재로는 마음과 몸이 병들어 앓지도 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상 농민의 말을 되새겨 보면 “지금까지 한국 농민의 모습은 살기에 벅찬 부모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조르면 그때마다 까까를 쥐어주며 달래는 모습과도 같다.

19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공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만 매달리다 농업은 손도 댈 염려를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업 개방 문제가 대두되자 정치적 고려로 농민들에게 상황을 정직히 설명할 기회를 잃고 차일피일 미루다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었다.

1970년대 일본이 대미무역 흑자로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이 요구되었을 때 토론자는 일본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농산품이 오렌지였으며 오렌지 수입을 강요당하고 있을 때 OECD의 수퍼바이저로 있던 히토츠바시(一橋)대학의 고지마(小島清)교수와 같은 사람은 강단에서 미국의 오렌지로 1억 2000만 인구가 하루 세끼 오렌지만 먹는다고 해도 대미무역 흑자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보다 미국이 일본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일본에 팔아야 되지 않은가 하고 항변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러나 TV에서는 정부의 설득으로 정든 오렌지 나무를 베며 향후 살아갈 걱정과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예견 못한 농민의 자성어린 소리도 함께 반영되었다. 그때 일본 정부는 비교적 소상히 농민에게 사실을 알렸고, 국회는 일본 전 농민의 소득이 GDP 5%수준이므로 나머지 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농민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물론 일본도 순조롭게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후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한국과 같이 복잡한 사정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우루과이 라운드 때나 칠레와의 FTA체결 때의 한국정부의 대 농민 대응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FTA 담당자들은 대외 협상보다 대내 협상이 몇 배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도 과감히 대 농민 문제해결에 선뜻 나서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농민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총론적으로는 다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농민 마인드를 생산업자(Producer)마인드에서 제조업자(Maker)마인드로 바꾸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민을 기업인으로.....	농민=기업가
논밭을 공장으로.....	논밭=공장
농사를 제품경영으로.....	농사=제품 경영
농업을 제조기업으로	농업=제조업
농산물 생산을 제조업의 제품 생산으로	농산품=제품
농산물 판매 활동을 제품 마케팅 전략으로	농산물 판매=제품 마케팅 전략
농산물 소비자를 상품고객으로.....	농산물 소비자=상품고객

즉, 농산물이 생산물이 아니라 제품의 개념으로 바뀌도록 사고의 전환을 꾀하여 그야말로 농민은 농제품 생산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농민 마인드의 전환만이 한국농민이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정부는 1960년대 UNCTAD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슬로건인 ‘원조보다는 수입을’ 이라는 말을 인용하자면 대책 없는 농자금의 지원보다는 농민 스스로 자력갱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체제로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 토론 요지 >

우리 농업의 미래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안세영 교수

세 차례나 국회 비준에 실패했던 한·칠레 FTA 협정이 지난 2월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곧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칠레와의 FTA 협정 비준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면 아직도 농업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한·칠레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3년 7월, 향후 7년 동안 119조원 규모의 “FTA 대비 농업 지원대책”을 수립,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이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주는 커녕 오히려 한·칠레 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적 농업 대책 수립으로만 비춰지고 말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수립시기도 문제였지만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신뢰감을 농민들에게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같은 경험은 1994년 쌀 개방 협상 때 한 차례 겪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1992년 12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1993년 협상에 나선 우리 협상단에게 ‘쌀 개방만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협상 전략과 정책 수립을 가져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쌀 개방 문제를 막기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한시적으로 쌀 개방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 대책 수립을 게을리 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현재까지도 쌀 개방을 10년간 유예시킨 당시의 협상 결과가 현재 우리 정부와 농민이 얼마나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올 해 2004년은 쌀 개방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해이다. 하지만 우리 정

부의 근시안적 정책 수립과 임기응변식 대응책마련으로 쌀 개방과 관련된 현안은 10년 전과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 집권하는 정권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5년에 맞춰진 임시방편적인 대응만 하였지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농민과 우리 농업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첫 째, 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농산물 분야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 관련 통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많은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고품질과 안정성이 보증되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품질차별화와 산지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농산물 시장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둘 째, 고령농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농업 시장을 더욱 규모 있고 효율성 높은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는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농가 육성과 정부 중심의 농업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업 전문가의 전문적 육성을 통해 혁신화된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농산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의 FTA 추진에서 농업은 열등 산업이 아닌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다각적인 정부의 정책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국 농업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 등에서 언제나 열세에 있는 패자산업이 아니라 충분히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승자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 토론 요지 >

농협개혁이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한국경제신문
육동인 논설위원

- 94년 UR협상 이후 농촌 구조조정을 위해 60조 이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소득에 대한 비중은 95년 95.1%에서 2002년 73.0%로 떨어졌고, 농가 빈곤율도 도시 빈곤율에 비해 99년 1.9배에서 2001년 2.7배로 늘었다. 농가호당 부채는 95년 9백만원에서 2천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농촌내 빈부차도 더욱 확대됐다.

- 이렇게 된데는 우리 정부의 농정개혁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 94년 UR협상 이후 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장미빛 청사진이 마련됐던 것을 모두 기억한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UR 이후 10년간 62억원을 투입했지만 농업경쟁력 향상은 커녕 농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 최근 한 칠레 FTA 체결을 전후해 나온 정책들도 UR 당시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는다. 농민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진 것에 비례해 청사진이 더욱 그럴싸해지고 지원한다는 돈의 액수가 180조원으로 UR때보다 3배 가량 더 늘어났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180조원이란 돈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160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 우리나라에는 농업부문만을 다루는 정부부처인 농림부가 있고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 농업 선진화를 위한 충분한 '이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농촌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 농업부문에 대해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는데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도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 그러나 '돈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그 결과를 평가 받는' 구조, 즉 실제 농업정책이 집행되고 자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이번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UR 이후 62조원의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농촌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졌는지 등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농업지원금을 받은 농민후계자가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는 등 그런 류의 보도만을 간헐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농업지원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농촌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또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서 어렵게 만든 장미빛 청사진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 농촌문제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개혁이다. 농협이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죽하면 최근 들어 농민들 스스로가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 실제 일부 농협 조직에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농협개혁요구를 하겠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 농협은 지역구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비중이 큰 조직이다. 그 동안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농민의 여론을 좌우하는 농협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정부 또한 농민이 아닌 농협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돌아났던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농촌은 어려워도 농협은 점점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들에 의해 뽑힌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책임은 없었다. 그러니 조합장 선거때마다 금품수수가 물의를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민들은 농협이 영농자금과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신용사업과 농자재의 공동구입 생산물의 공동출하 등을 통한 농민들의 생활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외신용사업과 임직원들의 권익 향상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인인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며 낸 이자로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결국 조합원은 240만명인데 조합과 중앙회를 합쳐 조직원이 6만7천명에 이르는 방만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공룡조직 농협부터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최근 정부는 현재 1300개에 이르는 단위조합 수를 약 5백개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농업이 독점해온 농업관련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일반은행에도 허용해 농협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원칙’만 있을뿐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다. 전국농민회는 지역농협의 경영구조 개선,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 등 개혁안,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신용

경제사업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이것도 단위조합을 250개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농협이 금융인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중심으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 이 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농산물 경쟁력은 상품 경쟁력보다 적품 적기 적소 적량공급 등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추세이다. 소비자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차별화와 산지유통 체계의 확립이 농업발전의 핵심요소라는 얘기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 4가지 방안, 즉 규모화와 코스트의 혁신, 상품혁신, 마케팅혁신, 서비스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농협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힘들다.

- 장기적으로 농협을 별도 독립조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묶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농촌 농업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듯 농업 전문가들의 단체인 농협이 알아서 하다가 농촌을 어렵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성과가 없으면 주민들의 투표에 물러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 중 하나일 수도 있다.

< 토론 요지 >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 기업의 관점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

1. 개관(주제발표의 보완점)

- ☐ 세상 변화 인식 : 글로벌 경쟁, FTA, 중국 부상, 원자재 파동, 웰빙, 바이오, 고속철도
- ☐ 농업·농촌 고통 공감 : 태풍 매미, 조류독감, 공동체 붕괴, 수도권·도시 집중
- ☐ 농업주체 확장 : 농민, 정부(농림부), 농민단체 외에 소비자, 농업법인, 기업, 해외 기관

2. 농업·농촌의 현실

- ☐ 농업 위상이 계속 하락

한국농업의 위상

	1970	1985	1995	2002
인구 비중(%)	44.7	20.9	10.8	7.5
GDP 비중	23.7	10.7	5.3	3.5
수출 비중	26.1	5.1	2.8	1.9
수입 비중	23.6	8.1	7.8	7.2
식량자급도	80.5	48.4	29.1	27.0
도농 소득격차	132	88.6	95.1	73.0
농가 부채/소득 비율	6.2	12.6	42.0	85.2

- ☐ 농촌사회의 붕괴

- 소득, 결혼, 자녀교육이 모두 불리 → 농촌에 머물 이유가 없음
-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한 학년 전원이 모친이 외국인

□ 정부 대책의 실효성

- 수십 조의 돈을 넣었지만 그 효과는?
- 농업발전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혼동
- 정부가 중심에 있고 가격하락·소득감소를 정부가 보전
 - 과대 포장된 정책지원이 기대를 높였고 자동개입을 유도
- 제시된 대안들을 실천하면 앞으로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가?
- 농업계 내부의 공감대 조성, 실질적·구체적 정책 구사가 필요한 시점

3.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기

1) 방향통일, 열린 사고와 고정관념 타파

- 우리는 방향이 주어지면 열심히 땀(붉은 악마, 새마을 운동 등)
 - 현재 방향과 방침이 불명확하여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음
- 세상과 타 분야를 바라보고 함께 일을 도모
- 농업은 성장산업인가? 농촌에 희망이 있는가? 농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 정부와 농민이 노력해도 농업비중과 경쟁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
 - (규모확대와 코스트 혁신의 한계가 존재)
 - 국가 자원배분 관점에서 농업부문을 재검토

2) 리스크 관리 및 현안 해결

- 조류독감, 황사 등 대책 실천(실패지식에서 학습)
- 부채 경감과 구조조정
 - 향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구사
- 개방에 따른 갈등조정

3) 농업은 엄연히 산업

- 농업과 농촌을 분리 : 농업은 산업, 농촌은 생활·복지 영역
 - 농촌관광은 농촌 공간과 문화 자원을 산업화하는 것
- 신성장동력을 창출 : 품목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 유망·수익 분야로의 사업전환 유도
 - 개방·경쟁을 받아들이고 부실화·도태를 인정
- 농업법인 육성과 기술개발에 주력(자발성, 창의성, 혁신, 기업가정신)

- 농업클러스터 등 기반을 조성

4) 농촌 문제는 Total Solution이 필요

- 도시민, 산업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기반 조성(규제완화, 인센티브)
 - 도농교류, 교육여건 개선 등
- 장기적으로 핵심인력 양성
- 종합정책 구사와 부처간 협조(예산과 정책역량을 공유)
 - 복지, 과학기술, 국토계획, 환경, 산업, 정보통신 등 타 정책들과 연계

5) 농지보전과 농자유전 재검토

- 농민들이 농지매각 대금을 도시형 토지에 투자
 - 도시 인근 농지를 산업용 및 상업용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농업부문으로 환류
- 다른 산업은 임금노동자가 당연한데 왜 농업은 부정적인가?
 - 농지임대, 농업근로자 양성화 등을 검토
- 토지/공간의 장기적 보존이 필요, 더 훼손시키면 마지막 보루가 사라짐

6) 유관 기관의 개혁

- 철저한 자기반성(농민을 위해 존재)
 - 농민들의 농협개혁 요구 사례
 - 서울대 농대가 관악산으로 간 이유는?
- 사회 타 부문의 공감과 협력을 획득하고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
 - 밥그릇 다툼, 갈등 유발로 비쳐서는 곤란
- 관료제, 조직이기주의 극복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공조

7) 기업과의 제휴

- 기업 활동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마케팅 등 앞선 노하우 흡수
 - 기업 유경험자를 스카웃
- 기업에게 농업 관련 사업을 시범 위탁
- 기업은 비즈니스 및 사회공헌 목적으로 농업계와 협력

8) 구체적 대안 발굴 및 실천

- 추상적 논의나 큰 그림 그리기에서 탈피
 - NATO(No Action Talk Only), NAPO(No Action Plan/Policy Only)
- 문제 정의 → 대안 수집·발굴 → 선택 → 실행 → 장기 혁신

9) 불씨 확산

- 구조보다는 사람이 중요(감동이 전제)
- 플라이휠 방식 : 작은 혁신과 성공 사례를 큰 흐름으로 확산
- 고향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세컨드하우스 건립

※ SERI의 농업관련 활동

- 벤처농업 대학 운영과 제주 분교 개교
-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 지역사랑 모임

10) 나부터.....

< 토론 요지 >

공급체인 관점에서의 농업과 관련산업의 과제

(주)두산 R&D Center 식품연구소장
허병석

오늘날의 경쟁환경은 동종 업종간의 싸움이 아닌 공급체인 간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공급체인이란 제품과 서비스가 원자재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급체인의 효율적인 관리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즉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보다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체인을 구성하는 각 구성인자(공급자, 생산자, 구매자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극적인 원가절감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공급체인내의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증대하고 기업간의 win win 게임을 이룩하는데 전략적인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의 물류체계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선진 기업들은 공급자와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공급자와의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과거 하청 내지는 경쟁관계에 불과하던 공급자와의 업무 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7월 말 청와대에서 ‘주요 농정추진’ 현황보고를 통해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 및 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 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처 명칭도 변경을 추진하고, 국 조직을 품목 조직에서 기능조직으로 완전 재편하고 집행기능은 지방 또는 민간으로 이관해 정책 중심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확대 및 생산 이력제 도입 등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및 기능성 식품 육성으로 수출 농업을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2004년까지 수출용 국가 브랜드 개발,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 강화 외에도 김치 등 우리 식문화 해외 홍보 및 해외 한국 음식점 네트워크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 및 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 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 개발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에서 이제 농업을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이제는 농업도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보다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체인을 구성하는 각 구성인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공급체인 상의 한 축인 농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단지 농민이나 농림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을 원료나 상품으로 이용하는 식품산업이나 유통업, 소매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지향이나 세계적인 수급관계에서 국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품과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생각하면 국내 원재료의 가격인하, 안정공급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다만, 안정적인 거래관계의 구축을 위해 생산 사이드와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가 각기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국내 원재료 조달 방식으로 장기계약이나 위탁재배 계약을 통해 생산자 사이드에게 안정 공급의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가공단계, 혹은 상품화를 목표로 한 협동,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공급체인 한쪽 끝에서 다른 곳으로의 잘못된 정보는 엄청난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재고 투자, 형편없는 고객서비스, 수익감소, 잘못된 생산능력 계획, 비효율적 운송, 잘못된 생산계획 등의 비효율이 기업의 채산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P&G의 물류 중역이 자기회사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에 대하여 주문 패턴을 조사하였는데, 소매점에서 판매가 진동하고 있었으나 그 변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의 주문을 조사해 보고 그 변화량 정도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또한 공급자인 3M에의 물품주문을 내용을 보고 그 진폭이 더욱 커졌음을 발견하였다. 소매 단계에서는 크지 않던 변화 폭이 공급체인 위로 올라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을 P&G는 Bullwhip 효과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Bullwhip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모든 기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주 심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일년 중 일정 시기에 생산이나 수확이 집중되고 이것이 공급체인 상에서 심한

왜곡으로 나타나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고객의 구매 정보가 점점 왜곡되어 공급자 쪽에 커다란 진폭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생산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비효율성으로 나타나지만 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소매업자에게 더욱 왜곡된 현상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체인에서 정보 왜곡, 확대 현상은 양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이제 시장 환경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Mass customization(대량고객화)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다양성, 신속성 등의 시장 요구사항과 제조관련 정보, 원료관계 정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되어 공급체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가는 것에 의해 공급체인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체인의 효율이 바로 고객가치 증대로 연결되고 고객가치 증대가 바로 경쟁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공급체인 상에 있는 모든 주체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으로 공급체인 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급체인 관점에서 국내 농업과 관련산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공급체인 주체들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공급체인 상의 주체들은 서로 의지하고 돕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공급체인에서는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만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 해결 과제는 효율적인 공급체인 프로세스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공급체인에 있는 주체들은 각기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교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는 EDI에 근거한 CRP(지속적 재고보충프로그램)와 같은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RP의 개념은 기존의 주문공급과정과 달리 EDI를 통하여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수요, 재고 등 필요한 정보를 매일매일 보내면 공급자인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기존의 구매자가 주문하면 공급자가 배송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간의 정보만 공유하고 공급자가

결정하여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급체인 프로세스 구축에는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각 관련 주체들이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에 있다.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저장, 물류 시스템은 국가적인 Infra임에 분명하고, 따라서 국가 사업으로 지원 및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업을 식량 공급과 환경 지킴이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중심 주체의 역할로 확대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 차원의 지원,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 차원의 공급체인의 효율화를 위한 농업 및 공급체인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

토론 메모

